

조선과 미국은 난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한호석 | 미주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미국의 극단적 반응 뒤에 감춰진 비밀
2.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코리아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
3. 조선과 프랑스,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이 다르다
4. 남아공식 핵포기가 코리아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다
5. 코리아반도 핵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1. 미국의 극단적 반응 뒤에 감춰진 비밀

2009년 1월 20일 오바마정부가 출범한 뒤로, 조선과 미국의 관계가 순항할 것으로 보았던 분석가들의 예상이 여지없이 빗나갔다. 2003년 8월 27일 부쉬정부의 제안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뒤에 5년동안 계속되었던 6자회담은 중단됐다. 조선은 6자회담이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조선이 6자회담을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조선과 미국의 대화통로는 막혀버렸다.

이것은 조선과 미국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격화된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긴장으로 밀려들어갔음을 말해준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진 까닭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선이 2009년 4월 5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안보리를 동원하여 제재를 결정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하나 둘이 아니고, 심지어 미국이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란도 2009년 2월 2일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미국은 유독 조선의 인공위성 발사만 물고 늘어지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만일 미국이 프랑스의 인공위성 발사를 '범죄행위'로 비난하면서 제재를 가한다면, 프랑스정부와 프랑스국민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이란이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그냥 넘어간 미국이 왜 조선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의 극단적 반응 뒤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 비밀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의 극단적 반응 뒤에는 군사적 비밀이 감춰져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절대로 입밖에 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군사비밀정보가 있는데, 그 군사비밀정보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미사일전력(戰力)에 관한 극비정보도 들어있을 것이다.

조선의 미사일 전력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면, 러시아의 미사일전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2005년 11월 처음으로 사거리가 8000km에 이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불라바(Bulava)를 시험발사하였고, 2009년 7월 16일에 11번째 시험발사를 실시하였으나 또 실패하였다. 이번이 일곱번째 실패다. 불라바는 핵탄두를 한꺼번에 10개나 장착하고 핵추진 전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고성능 미사일이다. 바다속에 숨어 다니는 잠수함에서 불시에 불라바를 한발 발사하면 탄두 10개가 분리되어 각기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가므로, 러시아가 불라바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날,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조선에는 핵추진 전략잠수함도 없고, 다탄두미사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왜 조선에 대해서 그토록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그 까닭은, 미국이 매년 100억달러씩 쓰면서 국력을 기울여 개발해낸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 미사일전술을 조선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러시아의 미사일전술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으로 전개되지만,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조선의 미사일 전술은 러시아식과 전혀 다른 독자적인 전술일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은 미국의 항공모함전투단을 제압하기 위한 미사일전술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특수화학탄두를 장착한 로켓을 항공모함전투단 상공에 집중적으로 발사하여 군사위성과 항공모함 전투단의 전파교신을 차단함으로써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나서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궤멸시킬 것이다.

미국의 일반적인 왜곡선전만 들리는 국제사회에서는 조선의 미사일 개발수준이 뒤떨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조선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자력으로 만들어낼 뿐 아니라, 독자적인 미사일전술을 개발함으로써 미사일전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은 미국에 맞서 미사일전술을 개발한 미사일 강국이다.

미국이 오랜 기간 동안 국력을 기울여 개발한 미사일방어망이 조선의 미사일 전술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깨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미사일 전력을 가진 조선이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개발하여 쏘아올렸으니 오바마정부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공위성개발은 고성능 미사일개발과 기술적 호환성을 갖는 것이므로, 조선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 미사일전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것으로 된다. 조선의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였다고 왜곡선전을 퍼뜨리고 서둘러 국제제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다급한 속사정이 그러하였다.

둘째, 미국의 극단적 반응 뒤에는 정치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 조선이 미사일 강국의 지위와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특히 조선의 대미관계에서 조선의 정치적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는 것을 뜻한다. 조선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될수록 미국은 조선을 상대하기 힘들어 지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조선을 6자회담이라는 이름의 다자관계에서 상대해왔지만, 조선이 미사일 강국의 지위와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선 뒤에는 조선을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해야 한다.

조선의 인공위성 발사와 지하핵실험 실시는, 다자관계를 통하여 코리아반도를 비핵화하려는 낡은 관점을 버리고, 조선과 미국이 대등한 양자관계를 통하여 코리아반도를 비핵화하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도록 미국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대등한 양자관계에서 핵협상을 벌이는 것은, 2009년 7월 27일 조선 외무성대변인이 발표한 담화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으로부터 그토록 강한 압박을 받고서도, 대등한 양자관계를 통하여 코리아반도를 비핵화하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기를 거부하였으며, 유엔안보리를 움직여 조선에 대한 국제제재를 강행하였다.

미국이 조선과 대등한 양자관계에서 핵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부한 까닭은, 대등한 양자관계에서 핵협상을 벌이는 경우 조선에게 질질 끌려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대미협상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면, 부쉬 정부 1기에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Colin Powell)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2009년 7월 28일 미국 씨엔엔(CNN) 텔레비전 방송의 유명한 대담 프로그램 ‘래리 킹 라이브(Larry King Live)’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조선을 뜻함-옮긴이)은 정말 이상하고 별난 체제에서 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체제를 미친 체제라고 부르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만나본 협상상대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힘겨운 협상상대였다.”

2.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코리아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

국제사회는 조선과 미국의 관계에서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일으킨 근본원인이 조선의 핵무기 보유에 있다고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 코리아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미국이 국제사회에 퍼뜨린 왜곡선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판단착오다.

물론 조선이 핵무기를 만들고 지하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이 핵보유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코리아반도 핵문제가 생겨난 것은 아니다. 조선의 핵무기 보유는 코리아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코리아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이 따로 존재한다.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코리아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은, 미국군이 조선측 영토를 점령한 것에 있다. 다시 말해서, 코리아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미국군의 조선측 영토점령인 것이다.

미국군이 조선측 영토를 점령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미국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 영토를 점령하였다는 뜻이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영토로 알고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은, 조선의 견지에서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 영토다.

조선의 현행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없지만, 조선이 코리아반도 전역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조선의 영토규정에 따르면, 조선의 영토는 북반부와 남반부로 구분된다. 자국 영토를 코리아반도의 북반부와 남반부로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이 코리아반도 전역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만일 독일군이 프랑스 영토인 알사스 로렌(Alsace-Lorraine)을 점령하였다고 가정하면, 프랑스정부와 프랑스국민은 독일군의 영토점령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국 영토를 외국군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심각한 주권문제를 제기한다. 만일 프랑스가 알사스 로렌을 독일군에게 점령당하였다고 가정하면, 프랑스는 영토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에서, 조선이 남반부 영토를 미국군에게 점령당한 것은 조선이 자국의 영토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영토인 알사스 로렌은 면적이 1만4496km²이고 인구가 285만명인데 비해, 조선이 자국 영토로 규정한 남반부는 면적이 9만8480km²이고 인구가 4859만명이나 된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면, 조선이 남반부 영토를 미국군에게 점령당한 것은, 프랑스가 알사스 로렌을 독일군에게 점령당하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타격을 조선에게 안겨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코리아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6년동안, 조선은 미국군이 점령한 남반부 영토를 되찾아 영토주권을 완성하는 과업에 자국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집중해왔다.

미국군이 점령한 남반부 영토를 되찾기 위해, 조선은 미국을 상대로 영토점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세계를 지배하는 오만한 대제국인 미국은 동아시아의 조그만 사회주의 나라가 제기하는 영토주권문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목살한 것만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조선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도발적인 대조선적대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미국은 조선의 북반부 영토(12만540km²)보다 82배나 넓은 광대한 영토(982만6630km²)를 가졌고, 조선의 북반부 인구(2266만명)보다 13.5배나 많은 거대한 인구(3억721만명)를 가졌는데, 그러한 강대국이 조선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자기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봉쇄와 압박을 밀어붙이는 미국을 상대하여 조선이 영토주권문제에 관한 협상을 벌이려면 무엇보다 먼저 미국과 대등한 협상지위를 획득하여야 하였다. 대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면 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무시당할 뿐 아니라, 혹시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 비해 영토와 인구가 비할 바 없이 적은 조선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

까? 조선에게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만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였다. 다른 길은 없었다.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3. 조선과 프랑스,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이 다르다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하여 나치 독일의 점령군을 자기 영토에서 몰아낸 프랑스는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5년 10월 18일 당시 프랑스임시정부 샤를 드골(Charle de Gaulle) 대통령의 지시로 원자력에너지위원회(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CEA)를 창설하였고, 그로부터 7년뒤인 1952년 4월 조선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국가과학원에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를 설치하였다.

프랑스가 핵개발에 착수하였던 1945년 10월 당시의 프랑스 국력과 조선이 핵개발에 착수하였던 1952년 4월 당시의 조선 국력은 비교하기 힘들 만큼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 놀랍게도, 조선은 코리아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전시에 핵개발에 착수하였다. 코리아전쟁에서 미국군은 조선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는 작전목표를 내걸고 무차별 폭격을 퍼부어 초토화하였고, 미국군은 자기들이 전쟁으로 파괴한 조선이 앞으로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1945년 8월 15일에 40년간의 혹독한 일제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조선은 공업생산력이 성장하지 못한 낙후한 농업국가였는데, 코리아전쟁에서 것처럼 미국군의 무차별 폭격까지 받았으니, 그나마 돌아가던 산업시설이 모두 파괴되고 수백만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40년의 식민통치와 미국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핵무기를 만들기엔커녕 나사못도 만들 수 없는 처지였던 조선이 핵무기 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핵무기개발사업은 남반부 영토를 되찾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방책이었으므로, 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기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1960년 2월 13일 프랑스가 프랑스령 사하라에서 70킬로톤(kiloton)의 폭발위력을 과시한 자국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하였던 때로부터 이태가 지난 1962년 1월 북측은 평안북도 녕변에서 연구용 원자로 건설에 착공하였다.

프랑스는 원자력에너지위원회를 창설하였던 1945년 10월부터 15년만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첫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 등장하였다. 프랑스는 첫 핵실험을 실시한 1960년부터 핵실험을 중지한 1996년까지 200차례 이상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현재 35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전략군(Force de frappe)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에 비해 공업화 수준이 매우 낮았던 조선은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를 설치하였던 1952년 4월부터 무려 54년이 지난 2006년 10월 9일 자국 영토에서 첫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 등장하였다. 조선은 2009년 5월 25일 두 번째로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국제사회는 조선이 실시한 핵실험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그러한 실패설은 조선을 상대로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대등한 협상을 벌이고 싶지 않은 미국이 날조, 유포한 정보조작의 산물이다. 파키스탄이 조선의 핵탄두 제조기술을 전수받아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였고, 이란과 시리아가 조선의 미사일 제조기술을 전수받아 미사일 생산국 대열에 올라선 것만 보아도, 조선의 군사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문제는,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과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5대 핵강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아니다.

분석가들은 조선이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릇된 주장이다.

만일 조선이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국가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고, 영원히 핵보유국으로 남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말

해주는 것처럼, 조선은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비핵화공약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조선이 비핵화공약을 채택하였지만, 핵야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이 비핵화공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남아있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은 자국의 남반부 영토를 점령한 미국군을 철군시키고 영토주권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핵문제 속에 철군문제가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독일군이 알사스 로렌을 점령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프랑스는 핵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알사스 로렌의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사스 로렌의 영유권보다 핵무기 보유에서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은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미국군의 남반부 점령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미국군의 남반부 점령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

4. 남아공식 핵포기가 코리아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다

부쉬정부 말기에 조선과 미국의 양자회담은 핵검증방안을 합의하기 직전 단계까지 진척되었다. 핵검증이란 조선이 핵포기를 이행하였는지를 미국이 직접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핵검증을 실시하려면, 어떤 대상을 검증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지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검증대상을 선정하고 검증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를 합의하기 위한 핵협상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과 미국은 핵검증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원래 조선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냉변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폐연료봉을 제거하는 불능화작업에 착수하였고, 핵신고서를 6차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제출하였으며, 냉변핵시설 냉각탑까지 폭파함으로써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핵검증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정면대결이 벌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쉬정부가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핵검증방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핵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조선은 자기의 극비군사시설을 모두 미국군사찰단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처럼 굴욕적인 핵검증을 허용할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핵검증방안과 조선의 핵포기공약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충적인 문제를 푸는 길은 없을까?

핵포기와 핵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3년 3월 24일 남아공대통령 드 클러크(Frederik Willem de Klerk)은 남아공 의회연설에서 남아공정부가 지금까지 약 4억달러를 들여 핵무기 7기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7번째 핵무기는 완성 직전에 해체하였다고 밝히고, 핵억제력을 자진해서 해체하고 모든 관련정보를 자진해서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튿날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은 남아공정부가 지정한 핵시설을 사찰하였다. 1993년 8월 16일 남아공의회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법을 제정하였고, 1995년 8월 15일 미국은 남아공을 핵확산 우려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

남아공을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것은, 남아공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한 핵시설 이외에 다른 핵관련 시설을 사찰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자진해서 폐기하였다는 남아공대통령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핵폐기 여부를 실제로 검증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이 자진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도 남아공의 핵폐기 과정과 똑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5. 코리아반도 핵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조선이 핵포기공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완전철군이다. 따라서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를 공정하게 실현하는 원칙은 핵협상과 철군협상의 병행이다.

오바마정부가 취임하였던 2009년 1월, 사람들은 미국의 새 정부가 핵협상과 철군협상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시작하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빗나갔다. 오바마정부는 핵협상과 철군협상을 병행하는 현안문제를 외면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핵협상만 벌이겠다는 부당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것은 부쉬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복한 에 병행적물국의 대북관계에서 오바마대통령이 외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조선에게 주어진 2009년의 선택은 핵협상과 철군협상을 병행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조선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일련의 조치는, 일방적인 핵협상에 집착하여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은 오바마정부를 ‘변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압박조치였다.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조선은 핵전략군을 해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그에 상응해서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군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핵협상의 목표는 조선의 핵전략군 해산이고, 철군협상의 목표는 주한미국군의 완전철군이다.

프랑스국방장관(Ministre de la Defense) 에흐베 모행(Herve Morin)이 프랑스의 핵전략군을 해산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조선이 핵전략군을 해산하는 문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만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주한미국군 철군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오직 오바마대통령만이 철군문제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과 미국이 핵협상과 철군협상을 병행하는 최고의 정치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담판형식으로 풀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오바마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09년 8월 4일 미국의 빌 클린턴 전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표면상 이유는 두 미국인 여기를 석방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그를 평양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클린턴전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오바마대통령에게 보내는 중대제안을 말해주었다. 그 중대제안은 조선이 핵포기공약을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였으니 이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결단을 내릴 차례가 되었다는 것과 코리아반도 핵문제를 풀기 위해 올해안에 오바마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오바마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초청의사를 받아들여 평양을 공식방문하는 날, 코리아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릴 것이며, 조선과 미국은 현재의 난국(impatse)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종속과 해방의 기로에 선 남코리아

장-폴 에베르(Jean-Paul Hébert)¹⁾ |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

<차례>

1. 미국 대외군수산업의 전략적 거점인 남코리아
2. 남코리아군수산업의 대미종속성 : 핵심기술이전의 좌절
3. 남코리아군수산업의 대미종속성 : 내수와 수출가능성 거세
4. 자주성의 과제 :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전환

남코리아는 중국보다 인구가 5배 적고, 경제적 규모는 일본보다 10배 적다. 그러나 5000여만 남코리아의 인구는 조선이나 대만의 2배에 달하며, 남코리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대만과 동일한 수준이다.

근래 남북교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남북간 대치는 이 지역에서 군사적 요소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실제로 남코리아는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각 2~3배 이상의 병력수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 병력감축경향과 달리, 오히려 남코리아는 병력수의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1991년 63만3000명이던 병력수는 2009년에 들어 68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27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도 증가추세다. 근 10년간 인플레이션 효과를 감안해 국방비 증가액을 계산해 보면 거의 2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코리아는 전세계 국방예산 규모 11위 국가다.(1985년 16위, 1975년 33위) 일본의 국방예산은 남코리아 군비의 2배에 달하며, 중국의 경우 남코리아의 3배에 달한다. 한편 남코리아의 군비지출은 국민총생산 대비 감소하는 경향이다.

■ 남코리아 국민총생산 대비 군비지출(%)

1985	5.1
1990	4.4
1995	3.4
2000	2.8
2005	2.7
2007	2.7

1. 미국 대외군수산업의 전략적 거점인 남코리아

남코리아의 군수장비 무역거래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 남코리아는 거대 군수장비 수입국이지만, 수출은 매우 미미하다. 근 10년간 남코리아의 군수장비 수입은 140억달러에 달하지만, 수출은 3억달러에 불과하다.

미국무기통제및군축기구(ACDA),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미의회조사국(CRS) 등의 남코리아 군 장비 수출입 규모의 정확한 추산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군수분야의 적자가 남코리아 무역수지 균형에 심각

1)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 :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평화와전략연구를위한범분야적연구소(CIRPES : Centre interdisciplinaire de recherches sur la paix et d'études stratégiques)

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은 동일하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는 2004~2008년 남코리아는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에 이은 세계 4번째 무기 수입국이라고 밝혔다. 미의회조사국에 따르면, 2000~2007년 남코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이집트, 인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과 대만에 이은 세계 8번째 무기수입국이다.

이외 다른 자료들도 남코리아가 주요 무기수입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코리아는 1950~2007년 미국으로부터 140억달러에 이르는 군자재를 FMS(Foreign Military Sales)²⁾협약에 따라 수입했다. 총 구매액중 약 25억달러가 미국의 원조에 의해 지원되었다. 이런 남코리아의 구매총액은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판매대금(650억달러)이나 이스라엘, 이집트(250억 달러)에 비해 적으나, 영국과 독일에 대한 판매대금(140억~150억달러)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남코리아는 미국 대외군수산업의 전략적 거점중 하나다.

유엔의 군수장비통상거래명부에 기록된 남코리아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992~2007년 남코리아는 러시아에서 탱크 35대와 장갑차 60대를 구입했고, 미국에서 대포 30대, 미국과 영국에서 전투기 66대, 영국과 독일에서 전투용 헬리콥터 20대, 독일에서 잠수함 2척,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175개, 그리고 미국에서 미사일 2636개를 구입했다.

한편 프랑스에게 남코리아는 근 10년간 판매되어 운송이 완결된 제품만 10억유로 이상을 구매한 10번째 고객이며, 동일기간 주문량으로 보면 7번째에 해당하는 주요 고객이다. 이는 프랑스 군수산업 수출량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로, 특히 1997년 이후 4%에 달하는 구입주문을 한 거대 고객이다.

2. 남코리아군수산업의 대미종속성 : 핵심기술이전의 좌절

남코리아 군수산업의 큰비중은 자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력 향상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남코리아 군수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2007년에는 세계 100대기업에 남코리아 4개기업(삼성56위, LG넥스원68위, 남코리아항공우주산업73위, 현대중공업100위)이 선정되었다.

남코리아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남코리아는 국내생산이 내수의 3분의2를 담보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내생산이 하청생산, 특히 미국제품의 하청생산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물론 최근 남코리아는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기업들로 눈길을 돌리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러시아 공 급자들보다도 협력관계를 넓히고 있다. 최근 산업화 가도에 들어선 국가중 남코리아는 자국의 민수산업능력을 군수산업으로 확대시키면서, 군수산업 발전에 많은 우선권을 주는 대표적인 국가중 하나다. 남코리아는 특히 항공군수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남코리아 국방정책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근본 요인은 반세기가 훨씬 넘게 남코리아영토에 미군을 주둔(2009년 현재, 2만8500명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이다.

현재 남코리아군당국이 재래식 군장비시스템의 자체조달이 가능하다고 해도, 고도의 신기술을 요하는 무기에 대한 남코리아의 대미종속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미군이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코리아는 핵심기술을 전수해줄만한 유럽기업들과 산업적, 기술적, 자본주의적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프랑스와 영국의 동의하에 유럽의 기업들이 기술이전을 제외함으로써 성사된 미스트랄미사일과 흑크전투기 구입에서 그 징조를 보였다. 남코리아가 국내 군수산업의 기술결함을 보강하려는 시점에서 미국과는 다른 유럽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남코리아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남코리아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자주화' 의지는 잠수함, 지대공유도미사일, 헬리콥터 등 관련 협상에서 끊

2) 미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에, 생산자와 상대국 정부 사이에 국방성이 개입하여 거래를 관리하는 제도 -편집자주.

임없이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반면 미전투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기술이전 요구가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3. 남코리아군수산업의 대미종속성 : 내수와 수출가능성 거세

남코리아는 이후 항공분야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전투기 구매를 결정하려 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남코리아 현지에서 전투기 조립과정을 공개하고, 운영체계를 이전하겠다고 했으며, 전략탄도미사일과 공대공유도미사일분야의 기술이전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만약 남코리아가 사들인 전투기가 미국산이 아닐 경우, 암호해독시스템과 남코리아와 미국간 군사시스템 통합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런 미국의 압력에 대해 남코리아국방부는 “우리는 모든 요소들, 특히 기술이전문제와 가격조건 등을 검토해 국익에 의거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남코리아의 이 같은 ‘자주국방’ 의지는 2000년 이스라엘외무장관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중국산 팔콘레이더전투기³⁾ 4대를 구입했다. 그해 4월 당시 이스라엘외무장관 데이비드 레비(David Lévy)는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우리가 국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발언했다.⁴⁾ 그러나 결국 3개월후 이스라엘국방장관 우드 바락(Ehoud Barak)은 중국정부에게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국익 보호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산 전투기를 수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편지를 보내야만 했다.⁵⁾

남코리아 역시 초기에는 미국의 구형전투기 모델인 ‘F15’와 프랑스제 차세대전투기 ‘라팔’ 사이의 경쟁에서, 기술이전과 제품의 현지조립 공개 등을 약속한 프랑스측 제안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한편 이처럼 2002년에 강제된 미국전투기 구매는 2006년에 보상된 셈이다. 2006년 미국의 벨(Bell)과 이탈리아의 오구스타 웨스트랜드(Agusta Westland) 등의 경쟁국중 유럽합작사 유로콥터에게 남코리아 헬리콥터프로그램 600~800억달러에 이르는 245기종 제품을 위한 협력을 맡기게 된 것이다. 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 9월 방위산업청(DAPA) 책임비서관 김정민은 DGA(군수장비의 국제프로모션을 위한 대표단) 책임자 자끄 드 리주지(Jacques de Lajugie)를 만나 협력강화를 논의했다.⁶⁾ 2006년 남코리아는 터키와 양국의 군사장비에 관한 협력, 특히 항공, 전자, 장갑차, 총탄 분야 개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⁷⁾

남코리아 군수산업의 자주화 실현은 내수의 자주화뿐 아니라 자국제품의 수출가능성 증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남코리아 제품의 수출은 제품들의 주요 부품들(‘K-1탱크’의 방탄벽, ‘Kt-1전투기’의 모터 등)이 미국산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처럼 미국이 관련한 수출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현실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다.

4. 자주성의 과제 :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전환

남북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남북대치라는 현 상황을 넘어서 7300만명의 통일코리아, 세계 17번째 인구대국이

3) 러시아전투기 ‘일리우원76’ 모델에 이스라엘이 이전에 개발했던 첨단 전자감시장치가 장착된 중국산 전투기

4) La Tribune, 2000년 4월 14일

5) Le Monde, 2000년 7월 14일

6) Xinhua 2008년 9월

7) Xinhua, 2006년 7월

될 미래를 상정해야 한다. 통일독일의 20여년의 경험은 남북이 통일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장기간 노력해야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코리아통일은 남북이 장기적으로 이뤄내야 할 정치적 목표다. 하기에 군수산업에서의 남북의 협력을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하나의 시험무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⁸⁾ 남코리아의 현실 인식은 새로운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군수제품 수출증가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⁹⁾

총체적으로 남코리아가 풀어야할 주요 과제는 국제사회에 단순 참여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강대국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 외교정책은 우방국들에 대해 막중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성과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군수분야에서도 차세대무기개발을 통해 남코리아와 같은 신흥경제국의 군수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처드 페를(Richard Perle)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도발적 발언으로 표출됐던 이러한 성향은 앞으로는 새롭게 은폐되고 포장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본바탕이 가진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만 느껴질 뿐이다. 즉,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향은 대외정책의 전반적 기조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코리아는 남코리아와 관련된 미국 정책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의 변화는 자주적 장을 건설하려는 남코리아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주적 장에서 남코리아는 자국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공포할 수 있을 것이다.

8) 이석수, "The Development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Typology, Performance, and Trends", Defense Policy Study, Vol.79, No.1, Spring 2008. 참고.

9) 한남성, 강인호, 박주수, 양영철, "A Guidance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Defense Industry : Issues and Strategies", Defense Policy Study, Vol.82, No.4, Winter 2008. 참고.

세계자주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녹취록)

모리스 쿠키에흐만(Maurice Cukierman) | 공산당출판사편집인

나는 오바마에 대한 기대어린 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오바마의 당선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기 위한 '변화'다. 오바마는 미국자본주의사회에서 자신의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당선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오바마의 당선은 우연적 결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선거시스템이 오바마의 당선을 가능케 하는 우연적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우연적 기회는 미국의 제국주의패권이 약화됨으로써 주어졌다.

우리는 부시정권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에게 보내는 기대는 오바마에 대한 특별한 기대라기보다 정권교체에서 오는 기대다. 전세계 진보 세력의 반응 역시 한마디로 미제국주의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호응된 것이다.

건강해지려면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그것이 먼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일지라도 그러하다. 그러하면 모든 상처를 가능한 빨리 치료해 완치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조선이 내린 결론이다.

코리아반도의 자주화를 달성하려면 그 걸림돌을 걷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이 코리아의 자주평화통일을 달성하려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시키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에서 핵실험이 진행되고 인공위성도 발사된 것이다.

조선의 핵실험과 인공위성발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크게 놓치는 게 있다. 바로 미국군대가 일본이나 한국 등을 동원해 반세기가 넘도록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연습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세계 좌파진영에서 바로 이러한 지점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세계 좌파진영이 정확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은 아니다. 다만 진실보한 관점이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는 분명히 진실보된 여론으로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정치정세에 작용한다. 이를테면 유엔안보리의 대조선제재는 사실상 무색한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 표출됐던 분노는 냉정을 찾아야만 했다. 이성을 잃었던 일본제국주의는 사무라이의 칼을 다시 감추는데 급급했다.

조미관계가 가장 예민한 시기 클린턴이 조선을 방문했다. 이런 과정은 관계정상화의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혹자는 클린턴이 개인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한 것이라 한다. 이런 의견에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1994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를 당시 클린턴정권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1994년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다. 또한 클린턴의 부인이 현 미국무장관이라는 점이다. 클린턴이 미국무장관인 부인과 어떠한 의논도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극단을 치닫던 조미간 긴장국면은 완화되었다. 전세계 진보세력은 조미관계가 다시 극단적 긴장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조미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평화적 핵이용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코리아반도

주둔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또한 아무리 그 존재를 부정하더라도 코리아반도 남측 미군기지에 숨어있는 핵시설과 핵공격시스템을 제거해야 한다. 이로써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이용만을 위한 핵이 사용되도록 해야한다.

나아가 제국주의가 가장 강력한 지배체제로서 핵을 이용했던 역사를 끝내고, 전세계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 조미대결에서의 조선의 승리가 코리아자주통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 토론녹취록 -

조미정세 분석과 전망

발표 : 모히스 쿠기에흐만(Maurice Cukierman) 공산당출판사편집인 역사교사
 장-폴 에베흐(Jean-Paul Hébert)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
 한호석 미주 통일학연구소 소장
 토론 : 지영철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정책국장
 이채언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동관 2009파리국제정책포럼 상황실장
 사회 : 김민재 2009파리국제정책포럼 정책팀장

김민재 : 세분 발제에 이어 바로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들어가겠다.

“조선의 일본교토통신사 사장단일행 초청은 일본수상에 대한 간접적인 초청의사”

지영철 : 한호석소장에게 질문하겠다. 조미관계정상화를 합의할 조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현 정세흐름에서 이와 관련된 일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호석 : 오바마대통령이 언제 평양에 갈 것인지는 오바마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웃음) 나는 클린턴이 대통령을 할 때부터 미국대통령이 평양에 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평양에 가지 않았다.

아마도 내 추측에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오바마대통령이 평양에 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적국의 수도를 방문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위동맹국가의 수반이 먼저 평양에 가길 바란다. 북측과 적대관계에 있는 지역의 수반은 두 사람이다. 이명박대통령과 하토야미수상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이명박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하토야미수상을 만나는 것을 더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이명박대통령은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약속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모조리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하토야미수상은 54년만의 정권교체로 이번에 새로 선출된 민주당출신이다. 따라서 하토야미수상이 먼저 평양에 가고, 그 다음 오바마대통령이 평양에 갈 가능성이 높다. 며칠전 조선에서 일본교토통신사 사장단일행을 초청했는데, 이는 하토야미수상에 대한 초청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동관 : 한호석소장에게 질문하겠다. 조미정상회담 개최는 코리아반도 정세의 급진전을 의미한다. 핵군축이 새로운 다자회담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라 보는데, 관련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묻고 싶다.

동북아평화체제수립을 위한 6자회담

한호석 : 코리아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은 6자회담에서 진행돼왔다. 그런데 6자회담은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됐다. 오바마정부가 6자회담의 기본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은 6자회담이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문제는 오바마정부가 6자회담을 하자고 계속 조르고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을 하지 않으면 오바마대통령이 평양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은 6자회담이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조선으로서는 6자회담을 할 수 없고, 미국은 6자회담을 안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꼬여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결방법은 있다. 6자회담을 하긴 하되 코리아반도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아니라 동북아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6자회담을 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다만 동북아시아 평화보장을 위한 6자회담은 핵군축회담이 아니다. 코리아반도 핵문제는 반드시 조선과 미국의 양자회담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에게 핵이란 ‘미국과의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 중 하나”

이재연 : 프랑스의 전문가 두분에게 물었다. 조선은 핵보유국이지만 핵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평양에 안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조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를 반미국가로 확산하는 거다. 가령 조선이 전세계 반미국가들에게 핵기술을 전수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에베흐 :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핵보유국 각자의 책임을 중요시한다. 책임질 수 있다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확산을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이 결코 좋게 보지는 않는다. 프랑스는 대단한 무기생산국이다. 프랑스는 온갖 무기를 다 팔아도 핵무기는 안 판다. 핵무기를 사려는 나라도 있고, 핵무기를 팔면 돈도 많이 벌지만 안 판다. 그리고 질문에서 반미국가를 언급했는데, 반미국가의 정의가 무엇인가. 반미국가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쿠기에흐만 : 레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 매우 구체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매우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입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적당한 상상과 종합적이지 않은 지식에 바탕해 정책을 수립하면 곤란해진다.

한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원래 조선은 김일성주석 때부터 항상 핵무기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찬성한 적이 없다. 오늘날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핵무장을 주장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선은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1993년에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이 핵사찰요구와 대규모 전쟁훈련 등으로 조선에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조미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유예된 탈퇴효력은 2003년에 다시 발생했다. 미국이 조미제네바기본합의를 위반하는 등 대조선적대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과 정치적 합의를 하는 한편 그 합의사항을 위반해온 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정권이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선군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가지 부연하면 조선의 군대는 다른 나라의 군대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라의 경제건설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군정치를 이해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조선만이 핵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다. 핵을 확산시키고 핵기술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장은 프랑스의 기술이전에 따른 것이었다. 프랑스는 파키스탄에도 핵기술을 보낸 사실이 있다.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임해야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했다. 조선에

계 핵이란 '미국과의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 중 하나다.

혹시라도 인종차별적으로 '얼굴이 노란 코리아인은 절대로 핵개발기술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전쟁용이던 평화적 이용이던 간에 지금껏 서양인들이 독점해오던 핵기술을 코리아인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영국정부나 프랑스정부 특히 미국정부는 아시아는 절대로 핵기술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독선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제3세계 어느 한 나라라도 핵기술에 접근한다면 그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이 가해질 것이란 점이다. 여기에는 한마디로 '어딜 감히 우리가 노는 곳에 오려고 하나'라는 식의 생각이 깔려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제3세계에 취해온 태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도도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가 많은 나라지만 어쨌든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객관사실을 하나 말하겠다. 힐러리가 핵무기확산방지조약에 꼭 서명해야 하는 국가리스트를 작성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민재 : 정한 시간을 초과했지만 더 토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발제자 세분과 통역자, 그리고 질의 응답과 토론을 함께해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며 박수로 마무리하겠다. <끝>